

이슈브리프 668호
(2025. 3.1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과 시사점

제668호

김경숙 신안보연구실



국문초록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사(1.20)와 첫 의회 연설(3. 4)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를 강조하고 대통령의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s)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초반 행정조치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특히 관세와 환율 부분이다.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시작으로 취임 100일 안에 구체화할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관세 체계 재조정을 통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축소에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하고 있는 중국, EU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은 무역수지 개선과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미중 관세 전쟁은 중국 뿐 아니라 미국도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라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으나, 취임 100일 늦어도 상반기에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1기 때처럼 실리 관점에서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로 한국을 공개 지목한 만큼 유연한 외교와 고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초불확실성의 시대,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협상 레버리지로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내는 실리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한미 간 전략적 협력 분야와 대미 장기 투자 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셋째, 대미 무역흑자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투자로 미국이 거둔 경제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 한 팀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다양한 채널의 민관 통상외교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위기관리 차원에서 유사 입장국들과 연대와 집단 회복력 강화도 필요하다.

주제어 : 트럼프 2기, 마가(MAGA), 대통령 행정조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관세, 한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의 집권 2기가 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1.20)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를 천명했고¹⁾ 첫 의회연설(3. 4)에서 아메리칸드림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귀환’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메모 등 대통령의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s)를 발표²⁾하고 곧바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속도감 있게 최대 대미 흑자국인 중국은 물론 멕시코·캐나다(USMAC), 유럽 연합(EU), 한국 등 동맹에 FTA 체결국에까지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시작으로 취임 100일 안에 구체화할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평균 관세가 4배나 높다고 지목한 만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가 우리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미국의 황금시대’와 ‘미국 우선주의 2.0’ 무역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달아 발표한 대통령 행정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³⁾와 경제 안보 전략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풍향계이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조치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⁴⁾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규제

1) The White House, “The Inaugural Address,” January 20, 2025,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the-inaugural-address/> (검색일: 2025. 1. 24.)

2) 취임 첫날 행정명령 26건, 메모랜덤 12건 등 총 46건을 포함해 취임 40여일 만에 약 100개의 행정명령과 400개 이상의 행정조치를 발표하였다.

3) The White House,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Priorities,” January 20, 2025,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01/president-trumps-america-first-priorities/> (검색일: 2025. 1. 24.)

4) The White House, “America First Trade Policy,” January 20,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검색일: 2025. 1. 24.)

철폐와 핵심광물 확보 정책, AI 패권 등 미중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 혁신 촉진 및 대중 견제이다. 그 가운데 트럼프 2기 임기 초반 주목할 것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특히 관세와 환율 조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통상 관련 담당 부처와 기관에 관세, 무역협정, 환율과 수출통제 등 무역 조치 수단별 활용 가능성 및 정비의 필요성, 대외수입청(ERS) 설립 타당성 조사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4월 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삼는 법적 수단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수단이다. IEEPA는 펜타닐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미국에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에 관세를 부과(2025.2.1.)할 때 적용한 근거법이다. 둘째,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관세 수단이다.⁵⁾ 5대 품목(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이어 추가로 구리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시사한 것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구리는 총알 등 미국의 무기 플랫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다. 셋째,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무역법 301조, 넷째, 환율 조작에 대해서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호 관세는 대부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고 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문제로 멕시코·캐나다에

5) 1962년 무역확장법 도입 이래 35건에 대해 무역확장법이 발동되었는데 트럼프 1기에만 철강 등 8개 품목에 대해 발동되었다.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그 이면에는 중국, 멕시코는 대미 무역 흑자국이고 캐나다는 GDP 대비 국방비 2% 지출 기준에 못 미치는 나토 회원국이라는 문제가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중국의 우회 수출국이자 미국에 공급하는 철강 비중에서 1, 3위를 차지한다. 마약 및 이민 단속을 위한 국경 강화에 나선 멕시코·캐나다는 관세 조치를 유예하면서 맞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10%(2.4)에 10%(3.4) 추가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했다. 무역수지 균형과 불법 이민자와 마약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해서 미국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안보를 포함해 모든 이슈에서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대상 5대 품목은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데 필수 품목이다.⁶⁾ 미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수입국인데 5대 품목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규제해야 하는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 이유로 기존 면세 쿼터 합의가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구리 등 추가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관세 징수를 위해 대외세입청(ERS)의 신설이다. 수입품 관세뿐만 아니라 이민·투자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무역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5대 품목 관세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 목적으로, 상호 관세는 무역 상대국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 중국은 물론 EU, 일본, 한국 등 동맹과 FTA 체결로 무관세 교역하는 국가들에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관세를

6)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2025년 보수 집권 정책 의제' 보고(2023년 4월)에서 무역 분과를 저술한 피터 나바로(Peter Kent Navarro) 전 무역 보좌관은 의약품, 반도체, 핵심 광물, 군수 제품 등에서 대중 디커플링(decoupling)을 제안했다.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은 국방비 증액, 투자 확대와 대중 견제에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동맹 길들이기 성격도 다분하다. 동맹국이라도 보복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방위협정이나 다른 관세와 연계해 보복을 위협함으로써 보복관세 억제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이다.⁷⁾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과 관세 체계 재조정 통한 적자 축소 의도

트럼프 2기 임기 초반부터 관세를 밀어붙이는 것은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과 관세 체계의 재조정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가 되는 여러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하려는 것은 미국 이익에 맞게 글로벌 무역 질서와 관세 체계를 재조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각국이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상하되,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결국 재조정의 핵심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재정적자 축소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공약인 감세를 추진할 경우, 세수는 줄고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4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8.4%(1조 8,330억 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세수 감소와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우는 대외 증세 개념의 성격이 짙다. 트럼프 2기는 미국의 무역 적자국 1위(2,944억 달러)인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을 위해 중국산에 대한 최혜국대우 관세(MFNF)를 철회하고 관세 체계도 재검토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10%를 추가 부과할 경우, 4년 동안 2조 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세 수입이나

7) 이데일리 2025.1.13

해외투자(In bound) 유치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미국 내수를 부양한다는 계획이다. 대미 무역 흑자국, 환율조작국,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 등이 우선 대상국이고, 유예 기간과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것도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2기 경제각료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다. 스티브 미란(Stephen Miran)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2024년 11월 작성한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가이드’)에서 전면적인 관세 인상과 강달러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재편을 주장했다.⁸⁾ 이를 위해 그는 보편관세를 20%~최대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냈고 2기에서도 막후 영향력을 가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는 그의 저서(『자유무역이라는 환상』)에서 과대 평가된 달러를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 해법으로 관세와 외국인 투자금에 수수료 등을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다.⁹⁾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 역시 무역수지 불균형을 환율 조작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¹⁰⁾ 2024년 대선 직후 뉴욕타임스가 언급했듯이 트럼프 2기는 ‘새로운 미국의 등장’이며 트럼프와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은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응 전략 : 맞대응과 협력

관세 위협을 받는 국가들은 맞대응과 협력을 혼합해 자국의 상황에

8) Stephen Miran,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Hudson Bay Capital (2024).

9) Robert Lighthizer, No Trade is Free (Broadside Books, 2023)

10) 연합뉴스 2024.4.30

따라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2기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경기 침체로 올해 성장률이 5% 이하일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안정적인 대미 관계 유지가 절실하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조치에 상응해 보복관세·WTO 제소로 맞대응하면서도 대미 보복 수위를 조절하고 대화의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 1기에 세 단계에 걸쳐 중국에 관세를 인상했지만,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도 이를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투자 허용(50% 소유) 조건으로 틱톡 금지법을 유예한 것도 긍정적 신호이다.¹¹⁾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관세(10~15%) 부과,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등 자원 지배력과 대외 영향력을 대미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위안화 절하로 이미 강달러인 달러를 압박할 수도, 위안화 절상을 협상 카드로 삼을 수도 있다. 우군 확보를 위해 인도와 교류 및 직항로 운항 재개 합의, 브릭스(BRICS),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관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일본, 한국과도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미국의 대중 견제 포위망을 느슨하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2위인 EU는 트럼프의 25%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응해 선 협상 후 맞대응 전략으로 대비하고 있다. EU는 대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LNG, 농산물, 무기 구매 확대, 현재 10% 수준인 EU산 자동차의 최혜국 대우(MFN) 세율을 미국 수준(2.5%)으로 낮추거나, EU의 탄소 국경조정매커니즘(CBAM) 시행 시 미국과 배출 인증 방법 조정 등 미국과 협상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¹²⁾ 동시에 EU는 보복

11) “Trump has postponed the TikTok ban. Was that legal?,” CBC, January 21, 2025, <https://www.cbc.ca/news/business/trump-postponed-tiktok-ban-legal-1.7436995>(검색일: 2025. 2. 5.)

관세 대상 목록 마련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 제3국의 경제강압 조치를 규제하기 위한 EU의 반강압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미국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¹²⁾ 유럽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이 감소하면 유럽의 성장률 역시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비해 내수 성장을 위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환율 압박에는 유로화를 절상하되 그 정도를 최소화하고 과잉 공급 등 중국의 시장 교란 규제에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EU의 대응책의 효과는 미지수이다.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는 출범 이전부터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유럽의 정치적 분열은 심화하고 있다. 독일 총선에서 중도 우파의 총선 승리와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와 친밀해지는 유럽 내 극우 정당의 득세와 유럽 내 자국주의 정책 기조 강화 등 내우 외환으로 EU의 집단적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지속 가능한가?

전 세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면 각국은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세를 수단으로 한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은 각 부처의 포괄적인 무역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는 4월 초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으로 미국의 황금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글로벌 무역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관세, 환율과 수출통제 조치 등은 트럼프 2기를 관통하는 핵심어가 될 것이다. 8대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1기에 견주어 볼 때 트럼프 2기에서도 이미 발표한 5대 물품과 구리

12) 경제안보리뷰 23-22, p.17

13) Politico, 10.31

이외에도 대상 품목과 부과 대상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지속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까지 ‘국가별’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검토를 완료해 상호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도 3월에 조기 시행할 수 있다고 발언(2.19 현지 시각)하는 등 관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¹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최소한 1년은 갈 것이며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것으로 예측한다.¹⁵⁾ 한편으로 양자 무역 협상을 통한 거래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한다. 트럼프 2기 미중 관세 전쟁은 전 세계는 물론 양국의 경기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중국 내 생산 기지의 역외 이전, 첨단 산업 육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 미국산 농작물 수출 감소와 수입업체 타격 등 관세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관세 충격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 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부 장관 등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거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감내해야 할 고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취임 100일 늦어도 상반기에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안보와 기술 정책을 연계해 보복적 관세 압박을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1기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이 하락하자 자신의 정책을 수정했던 것처럼 반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

시사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트럼프 2기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과 관세 체계 조정이 예상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14) Reuters, 2025. 2. 8.

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11189>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로 한국을 공개 지목했다. 한국은 한미 FTA로 사실상 무관세 적용 국가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 폐지도 언급했다. 미국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 기업은 보조금 수혜가 불투명해졌다. 예외 적용이 폐지되면서 한국의 수출 품목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업계의 타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 환율, 투자 확대와 방위비 증액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유연한 외교로 관세 폭탄의 파고를 넘어 외교 공간을 확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더 많은 기여와 책임분담을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천연가스 운송관 개발 참여 등을 제안했다.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백악관 내 조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까지 설치했다. 우리가 가진 협상 레버리지로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내는 실리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한미 간 전략적 협력 분야와 대미 장기 투자 액션 플랜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한미 간 원전, 조선업, 방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미국산 LNG, 전력 인프라 분야 등에서 협력을 위한 합의를 체결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R&D 투자를 제안해야 한다. 미중 간 기술 경쟁의 심화는 글로벌 기술 업계의 양분화를 가속할 것이다. 탈중국 추세는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질 전망으로 높은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제조 부문은 한국, 일본으로 이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¹⁶⁾ 또한,

16) <https://www.wsj.com/world/china/tech-companies-us-china-production-7e2b2b02>

USTR의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안은 중국 견제용으로 한국 조선업체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국내 업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

셋째, 거래 관점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로 미국이 거둔 경제 효과와 향후 투자계획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미 무역흑자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 비중 확대로 미국이 거둔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 성장을 수치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와 안보 연계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한 팀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AI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력 공급이 중요해지는 데 우리의 강점인 전력설비에 반덤핑 관세 가능성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트럼프 1기는 한국산 변압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인하(4.32%)한 반덤핑 관세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¹⁷⁾ 민관 통상외교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U, 일본, 대만 등 유사 입장국들과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투자 다각화와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과 집단 회복력을 위한 연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7) 2018년 최대 60.91%의 고관세 부과. 임산호,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제안보,” 경제안보리뷰 25-2호.